

「총장칼럼」

일관성 있는 현장 우선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고석규 | 목포대학교 총장,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



최근 일어난 몇몇 교육정책의 변화를 보면서 문득 ‘고려공사삼일(高麗公事三日)’이란 옛말이 떠오른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8월 13일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정책을 전면 수정하였다. 또 8월 27일에는 대입의 변화를 수반하는 ‘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대입논술가이드라인, 수능등급제, 국가영어능력평가의 수능영어 대체, 집중이수제 등등 여러 정책들이 1~2년 만에 뒤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수능역사 20년 중 17번 바뀌었다. 안 바뀌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이력이 나서 그런지 교육부에서도 쉽게 이랬다저랬다 바꾸는 듯한 느낌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육부를 교육실험부라 부르기도 하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우리가 마루타냐?” 라는 아우성도 들린다.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때문에 백년대계가 되어야 할 교육이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가 되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거나 장관이 바뀌거나 하면 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곤 한다. 물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새로운 시도는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대학설립준칙주의 같은 정책을 시급히 바꾸지 않은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거나 성과에 급급한 정책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시행착오만 겪고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어설픈 교육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한 해 한 해가 성장과정에서 겪는 오직 단 한 번의 시간들이다. 그리고 귀중한 하루하루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설픈 정책의 실험은 정말 곤란하다.

영국 교육의 문제를 다룬 리처드 거버의 《오늘 만드는 내일의 학교》에서는 “정치인들은 짧은 재임 기간, 효과적 선거운동구호, 언론의 통제, 성취도 지수 등에 지배된다. ... 왜냐하면 아무도 진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재임하지 않기 때문이다. ... 정부는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려고 한다. 정부는 직접 세운 목표, 통계, 그리고 숫자로만 설명하려 든다. 투자와 정책은 성과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만 급급하고,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부합하기 위해 애쓴다”라고 하여 정치가 백년대계에 큰 걸림돌이 됨을 잘 지적하고 있다. 영국과 같은 교육 선진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민을 가

지고 있다는 것을 보니,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보다 긴 호흡을 갖는 교육정책이 새삼 아쉬워진다.

한편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실천은 결국 교육현장에서 스승과 제자 간에 이루어진다. “좋은 학교보다 좋은 선생님이 좋다”라거나 “교실에서 교육의 변화는 시작된다”라는 말처럼 교사와 학생의 사제적 관계가 교육의 핵심이다. 제자를 사랑하고, 그래서 존경 받는 스승이 될 때 비로소 참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 그런 존경과 사랑을 나누는 곳, 그곳이 바로 교실, 즉 교육의 현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현장을 우선해야 한다. 교육현장을 우선한다는 뜻은 교사와 교수의 자율성을 무엇보다 최고의 가치로 보장한다는 뜻이다. 이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2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31조)”라는 헌법 정신에도 부합하는 기본적인 일이다. 그렇게 교육주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에 종사할 수 있게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을 것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실현을 기대하며 교육의 답은 교육현장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목포대학교 도서관연구소장, 인문과학연구원장, 기획처장 등을 역임하였고, U.C. Berkeley에 방문학자로 다녀왔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도시사학회회장, 교육부 대학발전 기획단 지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립대학 및 지방대학육성, 한국사연구 및 교육, 문화콘텐츠 등이다.